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정치와 법)

성명

수험 번호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A는 국가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문제, 즉 국가 중요정책의 결정, 공식적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국가 고유의 활동만을 정치로 본다. 반면 B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뿐 아니라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도 정치로 본다.

- ① A는 현대 사회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적합하다.
- ② B는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정치로 보지 않는다.
- ③ A는 B보다 정치의 주체가 다양하다고 본다.
- ④ B는 A와 달리 여름고등학교 학급회의 활동을 정치라 본다.
- ⑤ A와 B 모두 국가 형성 이전의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2. 법치주의의 유형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 B는 각각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중 하나임) [3점]

“통치자도 법에 의해서 구속되는가?”라는 질문과 “합법적 독재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가?” 라는 두 질문에 A의 응답은 일치하지만, B의 응답은 일치하지 않는다.

- ① 위헌 법률 심사제는 A의 실현 방안이라 할 수 있다.
- ② B는 법률 제정 과정의 합법적 절차만을 강조한다.
- ③ A는 통치의 합법성뿐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모두 중시한다.
- ④ B와 달리 A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한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본다.
- ⑤ A와 B 모두 인치(人治)를 부정한다.

3.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국가는 A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A에 대한 헌법 내용으로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가 있다.

- ① 국가가 문화 발전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리이다.
- ② A는 모든 종류의 전쟁을 금지한다.
- ③ A의 실현 방안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다.
- ④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 ⑤ A의 예시로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는 적절하다.

4. 다음 밑줄 친 ‘A’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되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이에 헌법은 다양한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기본권 중 ‘A’는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한 사회 불평등 심화로 인해서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생활과 실질적 평등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등장하였다.

—<보기>—

- ㄱ.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 ㄴ. 실제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이다.
- ㄷ. 현대 복지 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리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5.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3점]

A국의 시기별 정부 형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T 시기의 정부 형태는 직전 시기의 정부 형태와 동일하다. T~T+3 시기 중 정부 형태는 2회 변경되었다. T시기에는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시기  | 정당별 의회 의석률(%) |    |    |    | 연립 내각 구성 여부 |
|-----|---------------|----|----|----|-------------|
|     | A당            | B당 | C당 | D당 |             |
| T   | 22            | 33 | 40 | 5  | ㉠           |
| T+1 | 30            | 24 | 24 | 22 | ㉡           |
| T+2 | 50            | 33 | 10 | 7  | ㉢           |
| T+3 | 33            | 25 | 27 | 15 | ㉣           |

\* 각 시기의 정부 형태는 해당 시기 내에서 동일하며, 각 시기 내 정당별 의회 의석률 변화와 행정부 수반의 당적 변화는 없음

- ① ㉠은 ‘아니오’이다.
- ② T+3 시기에 A국은 대통령제이다.
- ③ T+2 시기에서 A국이 의원 내각제라면 ㉡에 ‘예’가 들어갈 수 있다.
- ④ T시기와 달리 T+3기에는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는 동일인이 아니다.
- ⑤ T+1시기가 의원 내각제라면 ㉢에 ‘예’가 들어갈 수 없다.

6. 우리나라 헌법 기관 A~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는 A가 국무의원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B의 제청이 필수적이다. 이때 A와 B는 각각 C의 의장과 부의장이다. 한편 D는 E의 장(長)과 F의 장(長)의 임명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의 장(長)은 헌법 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F는 행정부 수반의 직속 기관이지만 독립된 기관으로서 지위를 보장받는다.

- ① C는 행정부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② D는 A의 조약 및 비준에 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③ D의 국무 위원회의 해임 건의안은 A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④ F는 E의 장(長)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D는 결산 감사권, F는 결산 심사권을 가진다.

7. 정치 참여 집단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임.)

○○지역의 테마파크의 건립을 진행하던 도중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대거 출토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A는 유물이 출토되었으니 그 자리를 보존해야 한다는 이유로 테마파크 건립 중단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대로 테마파크 건립이 백지화된다면 주변 상권에 손실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B는 테마파크의 건립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여 건립 중단을 반대하는 집회를 지속 중이다. 이에 C는 A, B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후보를 해당 지역에 공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 ① A는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부정부패를 조장하기도 한다.
② B는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
③ C는 A, B와 달리 정치적 책임을 진다.
④ A는 B, C와 달리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⑤ A, B, C 모두 정치 과정에서 산출의 기능을 담당한다.

8. 죄형 법정주의와 관련된 A~C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3점]

Table with 2 columns: A, B, C and 1 column: 내용. Content includes: A: 적절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B: 범죄와 형벌은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 C: 법률 시행 이전의 행위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보 기>
ㄱ. A는 근대 형식적 의미의 죄형 법정주의이다.
ㄴ. B는 관습 형법 금지의 원칙이다.
ㄷ. C는 항상 예외 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된다.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9.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회사에서 근무하던 갑은 ○○회사의 노동 조합의 위원장이다. ○○회사는 갑의 승진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누락시켜 왔으며 평소 갑의 근무 태만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이에 갑은 □□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이에 지방 노동 위원회는 부당 해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편을 들어주었고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갑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에 갑의 자녀 을(18)과 병(17)은 어려워진 가정 형편에 직접 용돈을 벌어서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여름 카페의 사장 거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는 B와 C가 각각 거울씨로부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with 3 columns: 구분, 을(18세), 병(17세). Rows include: 계약 기간, 업무의 내용, 소정 근로 시간, 근무일, 휴게 시간, 주휴일.

- ① ○○회사는 해고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했을 것이다.
② 갑은 지방 노동 위원회의 판결과 별개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갑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노동 위원회의 구제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한다.
④ 을과 병의 휴게시간과 주휴일 모두 근로 기준법에 위법하다.
⑤ 병은 합의가 있었다면 1일 1시간의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

10. 민법의 기본 원칙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의 원칙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자유경쟁을 보장함으로써 근대 자본주의 발전의 법률적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근·현대를 거치고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민부의 격차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은 계층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다수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보장되던 계약 관계가 현대에서 수정되어 국가가 이에 개입하여 최소한의 제한을 가할 수 있게 되었다.

- ① 개인 간의 계약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② 개인의 재산권도 공공복리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③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신체 및 생명의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가 된다.
④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개인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하였다.
⑤ A는 계약 상대방을 선택할 자유는 보장되고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도 보장된다.

11.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17)는 여행을 위해 바닷가 인근의 펜션에서의 숙박 계약을 A의 유일한 법정대리인 B의 동의 없이 펜션 사장 갑(35)과 진행했다. 숙박 계약의 과정에서 A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갑이 알게 되었고 계약이 취소되게 된다면 갑은 재산상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기에 A에게 법정대리인의 B 동의를 요구했다. B는 A의 여행을 반대했고 동의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 이 상황을 고민하던 A는 B의 동의를 위조하여 펜션 사장 갑과 계약을 진행했다. 다음날 펜션 사장 갑이 A를 숙여서 숙박비를 시세보다 매우 비싸게 받았다는 사실을 A가 알게 되었고 이 사실에 분노한 A는 갑을 폭행하였다.

- ① 갑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갑은 A에게 동의를 촉구할 수 있다.
- ③ B는 계약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A는 동의를 위조했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없었지만 갑의 사기로 인해서 취소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갑에 대한 A의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B는 갑에게 법정 감독 의무자로서의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2.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과 을은 ㉠혼인 신고를 통하여 법률혼 관계가 되었고 A와 B를 출산하였으나, 갑이 가정에 소홀하여 갑과 을은 ㉡협의상 이혼을 하였다. 이때 A의 양육권은 갑이 B의 양육권은 을이 가져갔다. 병과 정은 사실혼 관계에서 C를 출산하였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결별하였다. 이후 갑과 병은 법률혼을 하였고, ㉢친양자 입양으로 미성년자 C를 입양했다. 한편, 을은 정과 법률혼을 하였고 정은 A를 일반입양하였다. 어느 날 정과 A가 여행을 가던 도중 ㉣정과 A가 사망했다. 사망 당시 정의 재산은 25억이었고 채무는 없었다.

- ① ㉠은 형식적 요건이다.
- ② ㉡은 숙려기간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 ③ ㉢에서 정과 C의 친족관계는 단절된다.
- ④ ㉣에서 정이 A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을의 상속액은 15억이다.
- ⑤ ㉣에서 A가 정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을의 상속액은 25억이다.

1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B는 각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지방 의회 중 하나임.)

현대 사회에서는 지방 자치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 자치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때문이다. 지방 단체는 각각 주민의 대의 기관 A와 지방 자치 단체를 대표하는 B로 구분되고 A,B 모두 주민들의 투표로 선임된다. 이때 B는 오직 소선거구제를 통해서만 선출된다는 점이 A와 구별되는 차이점이다.

- ① A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② A는 예산안 결산 심의권을 가진다.
- ③ B는 의결 기관으로 조례를 제정한다.
- ④ A와 B는 수직적 권력 분립 관계이다.
- ⑤ A, B 모두 주민 소환의 대상이 아니다.

[14~15]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 소식입니다. A(23)씨가 흥기를 사용하여 B(33)씨를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주변에 있던 각목을 사용하여 갑을 제압하였습니다. 제압 과정 중에서 A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폭행죄로 B씨를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행동이 구성요건이 해당하지만, B의 당시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정당방위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고 판사는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을 무참히 폭행하고 둔기로 살해한 병(22)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병에 행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병이 농아자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병이 농아자라는 이유로 감형되었다는 건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다면서 사법부를 비판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4. 위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ㄱ. B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었다.
- ㄴ. A가 피고인 신분이라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B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면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ㄹ. 병은 책임이 조각되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위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 ① 재판부는 병에게 보안 처분을 내릴 수 없다.
- ② 갑의 판결이 확정된다면 판사의 지휘로 형을 집행한다.
- ③ A는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보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이전에 필수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 ⑤ B는 피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A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갑은 마약을 소지 및 사용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고 항소심을 진행하던 도중 해당 형법이 개인의 자기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A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다. A는 해당 내용을 검토한 뒤 기각하였다. 그러자 갑은 B에 ㉡헌법 소원 심판을 신청하였고 B는 해당 형법이 자기 선택권을 일부 침해하나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 ① A는 대법원, B는 헌법재판소이다.
- ② A는 B에 직권으로 ㉠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은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이다.
- ④ 갑은 B의 판단에 대해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에 대한 A의 판단과, ㉡에 대한 B의 판단은 같지 않다.

1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3점]

A(16)는 같은 학교의 학생 갑(15), 을(14), 병(13)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대가로 학교에서 정(14)을 왕따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을과 병은 이를 수락하였고 A의 폭력을 버티지 못 한 갑도 가담하였다. 시간이 지나고 지속적인 금품갈취와 따돌림을 견디지 못한 정이 교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교사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 ① 갑, 을, 병 모두 범죄가 성립된다.
- ② 정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청구할 수 없다.
- ③ 교사와 A 모두 공동 불법 행위자이다.
- ④ 무의 피해에 대해서는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걸 원칙으로 한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일부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A~C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최근 갑국이 을국을 침략하면서 시작된 전쟁이 전 세계적 문제로 번지면서 A에서는 모든 회원국의 표결을 통해 갑국을 결의하는 제제안을 결의했다. B에서는 군사 파견 경제적 제제와 같은 실질적 제제를 위한 안건을 의결했고 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찬성했지만 갑국의 반대로 기각되었다. 이에 을국은 갑국과 맺었던 ㉡상호 침략 불가침 조약을 근거로 C에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 ① A에서는 표의 등가성 원리가 실현되지 않는다.
- ② B는 형식적 의결 기구이다.
- ③ C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다.
- ④ 갑국은 상임 이사국이다.
- ⑤ ㉡는 포괄적 구속력을 가진다.

19.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국제 문제가 발생하면 A는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 한다.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기 위해서 국방비를 증가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반면 B의 관점은 국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힘의 논리보다 국제 규범의 확립과 국제기구를 통한 분쟁 해결 방식을 추구한다.

- ① A의 예시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를 들 수 있다.
- ② B는 국제 상황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이라고 본다.
- ③ A, B 모두 중앙정부가 존재한다고 본다.
- ④ B는 A와 달리 동맹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있다고 본다.
- ⑤ A는 B와 달리 집단 안보 체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본다.

20.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 200인과 비례 대표 의원 100인으로 구성된다.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를 행사한다. 단, 갑국에 무소속 의원은 없으며 투표율은 100%이다. 갑국은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을 가진 투표 방식을 사용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각 선거구별로 선출되는 지역구 의원 수는 같고, 각 정당은 선거구별로 1인의 후보자만 공천한다. 비례 대표 의석 배분은 아래의 표를 통해서 산출한다.

=의회 의원 정수×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각 정당 지역구 의원 당선자 수

·최근 의회 의원 선거 결과

|         |     |     |     |     |
|---------|-----|-----|-----|-----|
| 구분      | A당  | B당  | C당  | D당  |
| 지역구 의석률 | 41% | 38% | 14% | 7%  |
| 정당 득표율  | 42% | 36% | 12% | 10% |

\*갑국에서 비례 대표 의석 배분 시 잔여 및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상황은 없다고 가정함.

<보 기>

- ㄱ. 원내 1당과 원내 4당의 의석수 차이는 100석 이상이다.
- ㄴ. 갑국은 최근 실시한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동일 선거구 내 당선자 간 득표율 차이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제' 를 채택하였다.
- ㄷ.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획득한 당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ㄹ. 비례 대표 의석을 두 번째로 많이 획득한 의석은 B당이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